

이 자료는 2001년 11월 17일 조건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道資料

擔 當	최낙균 연구위원
	무역투자정책실
電 話	3460 - 1079

WTO 도하각료회의 이후 뉴라운드 전망과 대책

主要内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李景台)은 11월 16일 WTO 도하각료회의 이후 뉴라운드 전망과 대책에 관하여 언론인 초청 정책토론회를 가짐.
- 뉴라운드 출범이 공식선언됨에 따라 앞으로 2005년 1월 1일까지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음. 서비스협상의 경우 1 단계협상에 대한 만족감이 표명된 반면, 농업 및 공산품협상의 경우에는 협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세부 양허협상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 뉴라운드의 출범 효과를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3.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전체적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분야의 현행 교역장벽이 30% 완화되고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이 총 1% 포인트 향상된다고 가정함.
 - 우리나라의 후생도 4.31% 증가하여 등가변환은 약 170억 달러에 달함.
 -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 건설, 기타서비스 산업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 광물, 농산물의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뉴라운드를 우리경제의 도약의 기회로 삼으면서, 동시에 국내산업의 구조조정방안 및 협상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함. 농업부문의 경우 농업구조개편 작업을 통해 고부가 및 기술농업을 구현하고, 개방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 서비스의 경우는 법률 및 교육 등의 대외개방을 국내 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함. 공산품분야에서는 일정한 공식에 기초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함. 규범 및 새로운 통상이슈 분야에서는 각 협상분야 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2001. 1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 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임.

□ 각료선언문은 뉴라운드 협상이 폭넓고 균형적인(broad and balanced) 작업계획을 포괄하도록 하였음.

- 이번 각료회의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농업협상의 경우 케언즈그룹이 주장하는 3대 협상원칙(시장접근, 수출보조, 국내보조)이 유지되었으나, NTC가 향후 협상에서 고려되도록 합의되어 성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이번 각료회의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던 반덤핑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의제로 채택되어 향후 자의적 발동 및 남용여지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보조금협정의 명료화를 위한 향후 협상에 있어 우리나라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안이 별도로 삽입되는 것에 반대했으나, 최종안에는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음.
- 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이슈는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서로 명분을 살리는 타협임.

□ 도하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각국은 2005년 1월 1일 까지 3년의 기간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음.

- 서비스협상의 경우 1단계협상에 대한 만족감이 표명된 반면, 농업 및 공산품협상의 경우에는 협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세부 양허협상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 반덤핑, TRIPS 분야 등은 기본적으로 협상의 기본개념과 원칙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 규정의 명료화와 지리적 표시의 확대 등을 통해 기존협정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이슈는 협상을 벌이겠지만 개도국들의 관련제도가 미비하고 통관자동화를 위한 인프라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자규범이 마련되더라도 비구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이들 2개의 이슈와 아울러 개도국의 반발이 심했던 투자, 경쟁 등의 이슈는 제5차 각료회의이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일종의 타협안이 채택되었으나 이는 논란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봉합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 이행문제와 연계하여 최종 합의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환경이슈는 EU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최종 초안단계에서 오히려 환경관련 문안이 강화되어 WTO 기존규범과 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등 3개의 사항은 협상을 개시하고 CTE에서 논의해온 작업은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필요성을 포함한 권고를 제출하도록 결정되어 향후 환경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자규범화 될 계기가 마련되었음.
- ☐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우리 경제는 농업부문의 다소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산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 ☐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현행 교역장벽(관세율)이 30% 감소되고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이 총 1% 포인트 향상된다고 가정하여, 그 효과를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3.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후생도 4.31% 증가하여 등가변환은 약 170억 달러에 달함.
 -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 건설, 기타서비스 산업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 광물, 농산물의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분석결과중 특기할만한 것은 우리나라의 관세율인하로 인해 국내 농산물의 생산 감축(-2.9%), 수입증가(19.4%)가 예상되지만 동시에 주요국의 농산물 관세인하로 우리나라의 수출도 증가(13.3%)할 것이라는 점임.
-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을 가진 외국업체가 진출해서 국내 서비스업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 자체로써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이외에도 유통서비스에서와 같이 산업구조의 개혁이나 통신서비스의 경우에서처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미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므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됨.
 -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기업들의 국제거래 관련 법률 자문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을 것임.
 - 교육서비스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외국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면, 최근 국내 교육제도를 불신하여 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냄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국내 대학은 물론 초·중등교육에까지 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쌀 수입에 대해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두 가지 방안의 효과를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사용하여 비교한 바에 따르면, 관세화유예의 지속보다 관세화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쌀 자급률, 농가의 손실보전, 사회적 총이익, 그리고 차기 회담에서의 협상력 등의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관세화를 채택할 경우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을 적절하게 소비자들로부터 환수하여 쌀산업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관세수입액을 논농업직불제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뉴라운드 협상이 빠르면 3년 이내에 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로서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방안 및 협상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함.

□ 농업부문의 경우 추가적 시장개방이 취약한 농어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농업구조개편 작업을 통해 고부가 및 기술농업을 구현해야 할 것임.

- 동시에 대외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의 농업분야의 이러한 상황에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 시장개방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의 확보(최소한의 식량자급율은 유지)
- ▶ 쌀의 관세화도 고려(관세수입을 허용보조금으로 활용)
- ▶ 직불제의 확대(환경보전 직불제 등)
- ▶ 농업투융자사업의 개혁(사업자 선정시 효율성 우선 고려)
- ▶ 농협유통사업의 개혁 등

□ 서비스업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이므로, 서비스협상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통한 한국경제의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법률이나 교육 등 그동안 국내 이해집단의 반대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분야에서는, 서비스협상에 따른 대외개방을 국내 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건설, 통신, 유통, 해운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 통신서비스와 전력서비스의 외국인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현행 스크린쿼터제도를 축소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전략이 바람직함.

□ 공산품분야에서는 결국 어떠한 관세인하방식을 채택하여 국가간에 엮히는 이 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쟁점사항인데, 우리로서는 일정한 공식에 기초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협상력을 발휘

- 미국의 주장에 따라 품목별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WTO회원국의 품목별 관세율 및 경쟁력 현황분석을 토대로 품목별 request/ offer 협상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부문별 협상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

- (최빈)개도국의 지원을 위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 및 섬유류제품 등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고관세의 완화, 관세할당의 공정한 배분 등을 제안

- 무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의 세수동향, 구조조정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내산업구조 개편 비전과 부합되도록 무세화의 대상을 선정

□ 규범 및 새로운 통상이슈 분야에서는 각 협상분야 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

- 반덤핑규범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정부조달의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서는 다자규범의 제정 자체가 투명한 무역질서의 조성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규범의 제정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국제적 공감대형성에 기여해야 함.

- 보조금, 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 TRIPS 등의 분야와 투자, 경쟁, 환경 등의 이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으며, 뉴라운드에서의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